

11일 Market Index			
↑ 코스피	2556.88	↓ 코스닥	912.55
	(+9.20)		(-1.63)
↑ 금리 (미국 9년)	3.865	↓ 환율 (원/달러)	1331.10
	(+0.070)		(-2.30)

‘서울 모든 대중교통 6.5만원에 무제한’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02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61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3년 9월 12일 화요일

## 사내이사 ‘독립성’ 우려 여전 이사회 조직 내 감사위도 모순

###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 마비된 내부통제 시스템

#### <중> 감사위원회의 허점

11개 은행, 3분의2 이상 사외이사 지배주주 의사 반영 가능성 높고 회의만 하고 재무제표 볼 일 없어 독립적 상근감사 도입 목소리도

지난해 A은행에서 발생한 700억원 규모의 횡령사고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에 걸쳐 이뤄졌다. 최근 B은행에서 발생한 500억원 횡령사고 또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금융시장에 충격을 줬다. 수 년 동안 진행된 횡령을 은행 내부에서 누구도 감지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내부통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감사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1차 책임은 경영진의 내부통제 허술이다. 경영진은 기업의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또 회사의 회계감사, 리스크관리, 준법감시에 대한 역할을 하는 감사

#### <은행별 감사위원회 현황>

	총인원	상임감사	사외이사
국민은행	3	1	2
신한은행	3	1	2
하나은행	4	1	3
우리은행	3	1	2
부산은행	4	1	3
경남은행	4	1	3
대구은행	3	1	2
광주은행	5	1	4
전북은행	3	1	2
카카오뱅크	3	0	3
케이뱅크	4	0	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또는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결과다.

#### ◆ 형식적 감사 비중 ↑

금융회사 감사위원회의 대부분은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기업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상법에는 이 중 사외이사가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가 맡도록 하고 있지만 감사위원 전원이 사외이사인 경우도 적지 않다. 회사로 출근하는 상근감사가 없어 해당 회사의 리스크관리 자체가 쉽지 않은

구도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 은행 등 11개 은행을 살펴본 결과 이들 감사위원회 모두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었다. 그 중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감사위원회 구성원을 모두 사외이사로 채웠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주 입김에 따라 상임감사를 선임하거나 연임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일 것”이라며 “사외이사로만 구성될 경우 내부 영향은 더 받기 어려워 독립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외이사라는 직책은 회사에 상근하지 않고 1년간 4회 이상의 이사회에 출석해 회의만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대다수다. 회사에 출석해 감사위원회를 개최하더라도 사내 감사조직이 올린 보고서를 열람하고 승인하는 것 외에 재무제표를 볼 일이 없다. 본다고 한 들 재무제표에 정확히 반영돼 있는지 확인할 뿐 제공하지 않는 기초자료와 절차를 확인하며 일일이 조사할 가능성도 낮다.

<3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대입 수시 원서접수 시작

2024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된 11일 경기도 수원시 조원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선생님과 진학 자료집을 살펴보고 있다. 일반대는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전문대(1차)는 이날부터 10월5일까지 대학별로 2024학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실시한다. 전문대 수시 2차 원서 접수는 오는 11월10~24일이다.

/뉴스

## 尹, 이르면 이번주 소폭 개각 국방 신원식, 문체 유인촌 유력

‘잼버리 책임’ 여가부 포함 가능성  
‘총선 차출’ 대통령실 참모 인사도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소폭 개각을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각 대상엔 국방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이 유력하며, 여성가족부 장관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7월 폭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과정 중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중심에 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교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국방부는 채상병 논란 이외에도 흥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 논란으로 야당의 주된 공격 대상이 되었는데, 윤 대통령은 이번 국방부 장관 교체로 국정 동력의 확보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이 교체될 경우 국가안보실 2차장과 국방비서관도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의 후임으로 합동참모본부 차장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65)이 거론된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이 채상병 사건 외압 및 은폐 의혹의 장본인이라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해임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3면에 계속>

/김재용 기자 juk@

박보균 문체부 장관의 후임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문체부 장관을 지낸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별보좌관(71)이 거론된다. 지난 7월 임명된 유인촌 특보는 8월에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국연예제작자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최근 논란이 된 아이돌 그룹 ‘피프티 피트피’ 사태 등 현황을 청취하는 등 보폭을 넓혀왔다.

준비 부족, 부실 대응으로 얼룩진 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의 책임을 주무부처였던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후임 인사로는 김현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64)가 하마평에 오르지만, 감사원이 새만금 잼버리 대회의 감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인선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개각과 함께 총선 출마를 위한 대통령실 참모의 인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홍보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의 총선 차출이 거론되는 가운데, 주진우 법률·강명구 국정기획·전희경 정무1 등 비서관급 인사의 총선 출마도 이야기가 나온다. 총선 경쟁력이 높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장관급 인사의 차출도 예상된다.

/박태홍 기자 pth7285@

### 화웨이, SK하이닉스 메모리 어떻게 가져다 썼나

## 中 현지대리점 유출, 제3국 ‘우회수입’ 가능성

“누구든 살아남기 힘들 것”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화웨이에 국산 메모리가 탑재된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반도체 업계가 반도체 유통 ‘구멍’이 어디였을지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미국 정부 조치를 누가 어떻게 위반했는지에 따라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수 있어서다. 중국 현지 유통업체의 ‘기행’이었을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는 가운데, 조사가 하루 빨리 마무리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전세계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은 상당 물량을 B2B 방식으로 직접 계약을 통해 공급한다.

웨이퍼를 그대로 전달하거나, 주문에 따라 간단한 패키징을 거쳐 해당 업체에 바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제품은 물량이 적지 않은 만큼 이같은 방식을 선호한다는 전언이다.

SK하이닉스는 2019년 미국 제재가 시작된 이후 화웨이와 완전히 거래를 끊었다. 이후 미국 상무부 지침에 따라 공급사와 거래선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화웨이와 거래했을 가능성이 없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들도 SK하이닉스가 화웨이와 거래할 필요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가장 유력한 유통 경로는 중국 현지 대리점을 통한 유출이다. 메리츠증권 김선우 연구원 등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 제조사들은 독립 대리점을 통한 유통을 선호한다. 때문에 메모리 업계는 여전히 현지 대리점을 통해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이 경우도 구멍이 생기기 쉽지 않다. 반도체 공급 업체는 현지 대리점에 공급할 때도 화웨이에 공급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최종 공급사

를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만일의 경우에도 대비하고 있다. 반도체를 유통하는 회사도 마찬가지다. 만약 현지 대리점이 화웨이에 몰래 물량을 전달한다면 쉽게 적발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현지 대리점과 계약시에는 철저한 검증도 거치고 있다. 거래 금액이 적지 않은 만큼 충분한 실적을 이룬 신용등급이 높은 회사와만 거래한다. 회사 경영과 지분 관계는 물론 그동안 어떤 회사와 거래하는지도 세부적으로 들여다본다는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계약시 대금 지급 능력을 보기 위해 신용등급은 물론이고 미국 무역 규제 후에는 다양한 관점에서 믿을 수 있는 회사인지도 철저히 따져본 후에서야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3면에 계속>

/김재용 기자 juk@

###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정부 “일본 오염수 1차 방류, 오늘 종료… 삼중수소 정상” /사진 뉴시스  
▲ 홍준표 “국방부가 정치 중심에 서면 나라가 휘둘러”

▲ 해직 언론기관장들 “비판 언론에 폭거… 쿠데타 수준”  
▲ 고용장관, 산하기관 ‘징계직원 성과급’에 “조속히 시정” 지시



▲ 조태웅 “시진핑 방한, 기대해도 돼… 중, 관계 개선 의지 분명”  
▲ 이주호 “이번 주가 교관보호 4대입법 고비”… 호소문 발표 /사진 뉴시스